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특집

한국의 현 단계 민주주의 진단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정상호**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형성 프로젝트 **정일준**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정상호
서원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지배적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두 담론은 모두 후기산업화의 구조적 변화가 창출한 새로운 가치와 주체를 간과한 채 산업화 시대의 정당정치와 결사체에 매달리고 있다. 본 연구는 후기산업화가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좋은 시민의 원리가 과거 준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의무적 시민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제는 정부의 신뢰 회복이나 공천방식의 혁신과 같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참여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좋은 시민들의 열정과 이해를 어떻게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한 대안으로 현재 지방수준에서만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의 제한을 철폐하고 로컬 파티를 전격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좋은 시민,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탈물질주의, 시민권

1. 문제제기: 현 단계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두 가지 오해

올해는 정부수립 70년이자 광주항쟁 35주년, 그리고 6월 항쟁 28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동적 과정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핵심 과제를 점검해 보는 역사적 성찰 작업은 자못 의의가 크다.

현 단계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적 관점에서 진단하려는 본 연구는 두 가지 담론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사회자본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개혁론'이다. 사회자본론이 현 단계 민주주의에 대한 지구적 시각에서의 '진단'이라면, 정당개혁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대안'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은 상이한 맥락과 문제의식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 둘을 하나의 비판 대상으로 설정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이 둘 모두 새롭게 부상하는 후기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을 간과하고 산업화식 '대중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는 불만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두 가지 담론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하여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이 지배적 담론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비관적 전망과 함의를 갖는다.[1]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객 민주주의에 결박당한 무기력한 정치상황을 바로 잡을 대담한 상상력은 물론이고 후기산업화의 구조 변화를 '효과적인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는 창의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 필자는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은 매우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 온 사회과학 담론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동일한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론은 다중(multitude)과 유연한 네트워크들이 펼치고 있는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를 외면하였고(하트 2002), 정당개혁론은 정치의 본질과 외연을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로 제한하였다. 이제, 두 가지 담론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밝힐 차례이다.

---

1)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발전은 어원의 단순함과는 반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왔다. 그 한쪽에는 민주주의를 슘페터(J. Schumpeter)나 달(R. Dahl)처럼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제도적 운용으로 보는 처방적 다원주의자들(prescriptive pluralist)이 있는 반면, 반대 방향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구처럼 '오늘은 지배하고 내일은 지배받는' 즉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 기초한 다수 지배의 원리가 있다. 물론 본 논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후자의 관점에 더 근접해 있다. 전자의 계보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는 에인스워스(Ainsworth 2002)를, 후자에 대해서는 마넹(2011)을 참조.

2) 효과적인(effective) 민주주의는 프리덤 하우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지표와 정부의 시민적 요구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의미하는 세계은행의 반부패 수치로 측정된다. 효과적인 민주주의는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버(B. Barber)의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나 펑과 라이트(Archon Fung and E. O. Wright)의 심층 민주주의(deepening democracy)와 유사하다(Fung, Wright 2003).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후기산업화의 핵심 지표인 자기표현 가치의 상관성은 무려 .90에 달했다(잉글하트·웰젤 2011, 340).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지배 담론으로서 사회자본론과 정당개혁론의 한계

1) 사회자본론 비판

퍼트남은 이탈리아의 효과적인 민주지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역별 거버넌스의 차이는 그 지역이 풍부한 자율적 사회조직의 체계를 갖추었느냐가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신뢰, 시민참여, 사회적 연대와 유대를 형성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였다(Putnam 2002).

이제는 고전이 된 퍼트남의 『*Bowling Alone*(나홀로 볼링)』(2000)이 출간된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American democracy is at risk)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퍼트남은 미국에서 사회자본이 감소한 일차적 원인을 시민성(citizenship)의 활력과 주권자로서 시민능력의 잠식, 다수 미국인들의 정치와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회피, 시민생활의 약화,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의 감소 등등을 꼽았다(Macedo 2005; Wolfe 2006). 미국에서 수입된 민주주의 위기론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테제(Korean democracy is at risk)가 대부분 부정확한 진단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 위기론의 주된 논거를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따져보자.

(1) 신뢰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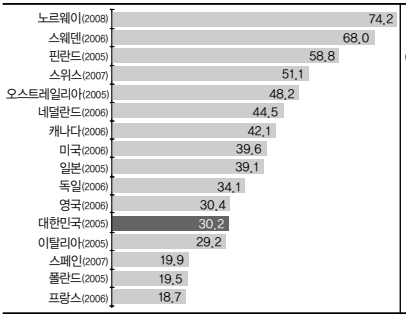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에 바탕을 둔 신뢰, 규범 또

는 네트워크로 정의되는데, 이 중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Putnam 1993). 사람이든 정부든 신뢰의 감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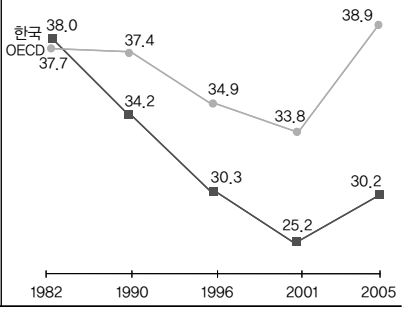
하지만 신뢰의 감소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다지 유난떨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퍼트남의 주장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보다 젊고 보다 많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도발적 주장에 동의한다(Dalton 2008, chapter 3).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던 정부의 신뢰와 엘리트의 권위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지수(30.2%)는 노르웨이(74.2%), 스웨덴(68.0%) 등 북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OECD 평균(38.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5년 이후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동열 2013).

〈그림 1〉 주요 국가의 신뢰지수



〈그림 2〉 한국과 OECD 신뢰지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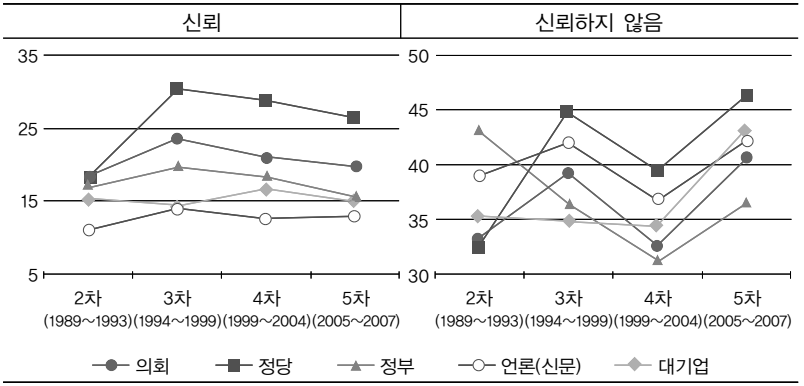
자료: 김동열(2013, 13-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하지만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의 하락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요 공적 기구들의 신뢰가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 비율은 무려 60~70%에 이르고 있다. 유일하게 NGO에 대한 신뢰만이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마저 변화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45개국의 NGO에 대한 신뢰도는 2002년에는 59%(대한민국은 77%)에 달하였지만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6차 조사에서 NGO의 신뢰도는 53%(대한민국은 61.4%)로 하락하였다(KSDC 2010).

정치의 영역에서 신뢰는 참여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신뢰와 참여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민재(2011)의 연구에서는 제도신뢰와 참여 의향은 반비례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제도신뢰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의향은 떨어졌고 제도신뢰가 낮을

〈그림 3〉 세계가치조사의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 추이



자료: 한상익(2014)

수록 정치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도신뢰가 미친 정치참여 형태는 지방선거라는 제도권 정치참여보다는 촛불집회와 같은 비제도적인 형태의 정치참여였다. 하종원의 연구 또한 정치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정치신뢰감은 실제 정치 참여경험뿐만 아니라, 미래 참여의사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의 경우, 정치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였고, 반대로 정치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하종원 2006, 383-390). 이준웅·김은미·문태준(2005)의 연구 또한 대인신뢰와 사회적 연계망은 사회정치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적 신뢰는 사회정치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찬(2002, 104-105)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일반론과 달리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낮았다. 그는 그 이유를 민주주의 정권 아래에서 활발한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는 정치과정에 대한 부정적 정보획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신뢰감이 정치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적지 않다(Conway 1985; Richardson 2003). 안명규·류정호(2007)의 연구는 비록 인터넷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신뢰가 높을수록 인지적 정치참여와 행위적 정치참여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호(2009)의 연구 역시 인터넷 자기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는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정치냉소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신뢰의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치사회적 참여의 쇠퇴와 민주주의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다. 잉글하트는 미국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가입 감소가 사회적 자본의 쇠퇴이자 민주주의 위기의 증후라고 보는 퍼트남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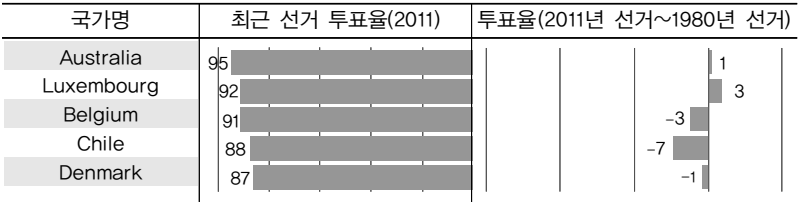
따르면 감소한 것은 외적으로 강제되고 동원된 결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 대신 스스로 조직되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집단행동과 같은 서로를 연결시키는 느슨한 유대는 오히려 증가했다(잉글하트·웰젤 2011, 436).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경험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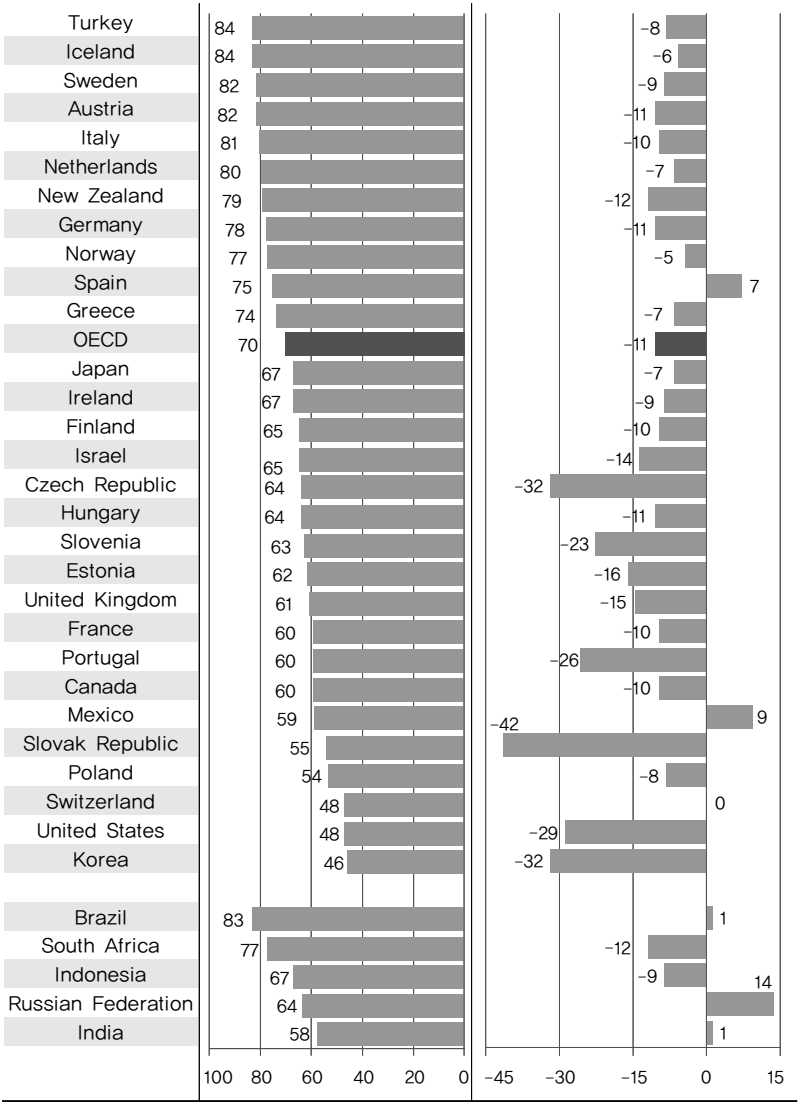
(2) 정치참여의 위기: 투표율 하락

위기론의 또 다른 유력한 근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참여의 급격한 하락이다. 〈그림 4〉만 보면 민주주의 위기론이 맞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 하락의 정도를 외국과 비교할 때 그 하락폭이 2~3배가 되며, 특히 지난 10년간 급속히 하락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다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투표율 하락은 멕시코(42%)에 이어 2위(3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기 효과를 간과한 과장된 주장이다. 〈그림 4〉는 역대 최저로 기록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63.0%)와 18대 총선(46.1%)의 투표율로 인한 착시효과이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투표율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30년간 일어난 보편적 현상, 특히 민주화로의 이행에서 공고화과정을 거친 사회에서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림 4〉 OECD 국가의 투표율 추이




Turkey 84 -8
Iceland 84 -6
Sweden 82 -9
Austria 82 -11
Italy 81 -10
Netherlands 80 -7
New Zealand 79 -12
Germany 78 -11
Norway 77 -5
Spain 75 7
Greece 74 -7
OECD 70 -11
Japan 67 -7
Ireland 67 -9
Finland 65 -10
Israel 65 -14
Czech Republic 64 -32
Hungary 64 -11
Slovenia 63 -23
Estonia 62 -16
United Kingdom 61 -15
France 60 -10
Portugal 60 -26
Canada 60 -10
Mexico 59 9
Slovak Republic 55 -42
Poland 54 -8
Switzerland 48 0
United States 48 -29
Korea 46 -32
Brazil 83 1
South Africa 77 -12
Indonesia 67 -9
Russian Federation 64 14
India 58 1
100 80 60 40 20 0
-45 -30 -15 0 15

자료: OECD(2011)

〈표 1〉 민주화 이후 주요 선거 투표율(%)

구분	구분	총투표율	구분	구분	총투표율	구분	구분	총투표율
대선	'87 13대	89.2	총선	'88 13대	75.8	지방 선거	'95 제1회	68.4
	'92 14대	81.9		'92 14대	71.9		'98 제2회	52.7
	'97 15대	80.7		'96 15대	63.9		'02 제3회	48.9
	'02 16대	70.8		'00 16대	57.2		'06 제4회	51.6
	'07 17대	63.0		'04 17대	60.6		'10 제5회	54.5
	'12 18대	75.8		'08 18대	46.1		'14 제6회	56.8
				'12 19대	5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표 1〉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한 상황을 말해준다. 최근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선거 모두 오히려 투표율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이는 후기산업화에 접어든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한국의 경우 바닥을 쳤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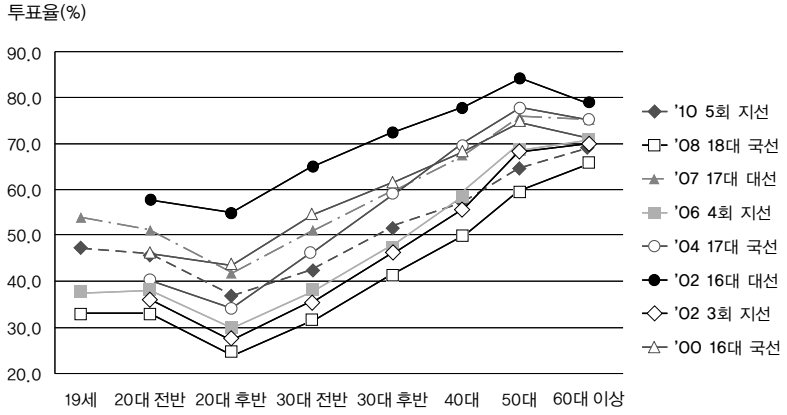
3) 이 자리를 빌려 날카롭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익명의 한 평가자는 최근 한 차례 선거 결과만을 놓고 투표율, 특히 20대의 선거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논평자의 지적대로 투표율의 추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것으로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주목할 점은 최근 3차례 선거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와 교육 등 '삶의 질'의 문제가 부각이 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의 증가는 소위 생활정치의 대두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신세대의 보수화

퍼트남은 미국에서 사회자본이 감소한 일차적 원인을 시민적 품성을 갖춘 위대한 세대가 무관심한 X세대로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대치된 결과라고 주장하여 세대 논쟁에 불을 지폈다. OECD 국가에서 투표율의 하락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원인 중 하나가 20대를 비롯한 신세대의 보수화와 탈정치화 경향이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이들 신세대의 정치 무관심과 지나친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앞선 민주화세대와 달리 보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먼저, 우리나라를 사례로 신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해치고 있는 주범이라는 비난이 올바른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러한 비판의 1차적 근거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이다. 〈그림

〈그림 5〉 주요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출처: 김재한(2011, 17)에서 재인용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표 2〉 대통령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단위: %)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총투표율
대선	'97 15대	-	68.2	82.7	87.5	89.9	81.9	80.7
	'02 16대	-	56.5	67.4	76.3	83.7	78.7	70.8
	'07 17대	54.2	46.6	55.1	66.3	76.6	76.3	63.0
	'12 18대	74.0	68.5	70.0	75.6	82.0	80.9	75.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투표율 분석자료(오세재·이현우 2014, 217에서 재인용)

5〉는 총선까지 포함하여 8개 주요 선거의 연령대 투표율을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 연령대 가운데 20대의 투표율이 예외 없이 가장 낮았다. 정리하자면,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급속한 저하를 가져온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지만 〈표 2〉를 보면 다소 사정이 달라진다. 물론 예외 없이 소저로고(少低老高), 즉 젊은 계층의 투표율이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변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대는 총투표율의 현격한 증가를 가져온 1등 공신이었다.

또 하나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야권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불거진 '20대의 보수화 테제'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경제위기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원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사회의식의 보수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4] 보수화 논쟁의 미시적 수준은 특

4) 이에 대해 한준(2008)은 보수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사회나 문화가 아니라 주로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쟁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표 3〉 연령대별 투표 선택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노무현(2002)	59.0	58.3	48.1	43.1	34.9	49.1
이회창(2002)	34.9	34.2	47.9	57.9	63.5	46.8
문재인(2012)	65.8	66.5	55.6	37.4	27.5	48.9
박근혜(2012)	33.7	33.1	44.1	62.7	72.3	50.1

* 2012년 방송 3사 출구조사, 2002년 방송사 출구조사
자료: 고원(2013, 155)에서 재인용

정 세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을 가져온 17대 대선 이후 386세대와 20대의 보수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세대의 보수화 주장은 그다지 확고한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 또한 신세대의 보수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대표적 학자는 어수영이다. 그는 세 시점(1990; 1996; 2001)의 시계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2004)에서 ①탈물질주의자에 비해 물질주의자가 훨씬 많다. ②지난 10여 년간 물질주의자 비율이 감소했고 그만큼 혼합형이 늘어났으나 탈물질주의자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 ③연령별로 보면 탈물질주의자 비율이 젊은 층에서 일관성

강명세는 "해방 이후 역사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10년의 진보는 일시적 시기로서 보수주의 시기 속에 갇힌 진보의 짧은 시기"일 뿐이며 17대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아니라 '강고한 보수주의의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강명세 2008, 182).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있게 높게 나타난다. ④탈물질주의자는 시민적 관용성이 높고 저항적 정치행위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이용했지만 탈물질주의 지수를 어수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여 대전과 목포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욱·김영태(2006, 188-189)나 마인섭·장훈·김재한(1997)의 연구 결과 모두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민병기 외(2013)의 최근 연구에서도 탈물질주의자가 21.7%로 물질주의자 15.4%보다 6.3%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학생의 탈물질주의자 비율(30.2%)이 남학생(16.2%)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민병기 외 2013, 91).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아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표 4〉 우리나라 20대의 가치 분포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어수영 (2004)	1990	20대	15.6	74.4	10.0
	1996	20대 전반	4.3	82.6	13.1
		20대	13.2	79.9	6.9
	2001	20대 전반	4.2	82.1	13.7
		20대	13.1	78.3	8.6
김욱·김영태 (2006)	전체		5.1	87.7	7.1
	대전		6.8	89.2	4.0
	호남		3.4	86.2	10.3
민병기 외(2013)			15.4	62.9	21.7

〈표 5〉 우리나라 시민들의 가치 분포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어수영(2004)	23.4	71.7	4.5
KSDC(2010)[5]	17.9	75.8	6.3

수행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2010)의 결과이다. 10년 전에 이루어진 어수영(2004, 199)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5.5%나 줄어든 반면 혼합형과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은 각각 4.1%와 1.8%가 증가했다.

정리하자면, 탈물질주의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주의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1990~2005년 동안 "탈물질주의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자 비율 역시 감소했는데 물질주의자들의 감소폭이 오히려 더 크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박재흥·강수택 2012, 82).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이미 한 세대 전에 후기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서구 선진국보다는 10~15% 정도 낮지만, 그럼에도 물질주의자의 비율의 감소는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 중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5)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5년마다 시행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우리나라 수행기관이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정당개혁론 비판

(1) 정당개혁론의 개요

정치학 영역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전개된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가 정당개혁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최장집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저술을 통하여 한국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과제로, 내용적 측면으로는 '사회경제 정책의 발전'을, 제도적 차원으로는 '정당정치'의 정착을 지적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를 실현할 정당의 바람직한 모델과 건설 방식을 둘러쌓고는 학계와 정당,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의 한국적 적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표성, 책임성, 시민사회와의 강력한 연계 등을 들어 유럽식의 대중정당 모델을 제시(최장집 2007; 박찬표 2003; 서복경 2003)하는 데 반해 한편에서는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로 평가하면서, 미국식의 원내정당 또는 선거전문가 정당이 탈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대안이라는 주장(정진민 2007; 2009; 임성호 2003)이 팽팽히 맞서왔다.

두 모델의 선호의 차이는 유럽식이냐 아니면 미국식이냐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지향 가치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최장집·박찬표·박상훈(2007) 등이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책임정당 모델에서는 인민주권, 책임성, 정체성이 일차적인 원리로서 강조된다. 한편 원외 정당을 주창하고 있는 이들은 정당정치의 원리로서 의원들의 자율성, 입법과정의 효율성,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의 정치과정에서는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확고한 당의 강령과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한다면 후자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율적 협상이 중시된다. 최장집·박찬표·박상훈의 대중조직 정당 모델의 구체적 표현이 책임정당정부라면 정진민의 선거전문가 정당 모델의 한국적 적용은 원내

정당이다.

이러한 인식론과 선호 모델의 차이에 근거하여 두 모델의 옹호자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정치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정당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개혁 조치들을 정

〈표 6〉 최근 한국 정당의 주요 개혁정치의 성과와 문제점

	과거의 폐해	성과	새로운 문제점
지구당 폐지	– 고비용 정당구조 – 지구당위원장의 사당화	– 지구당 운영비와 인건비 폐지	– 정당조직의 토대 약화 – 지방당의 유권자 연계 기능 약화
지지자 중심의 정당	– 품삯당원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방해 – 품삯당원 유지로 인한 고비용	– 고비용 축소	– 당원 축소 및 관리 소홀 – 정당의 유권자 기반 약화
원내 정당화	– 의원직보다 당직 선호 – 원외의 과도한 요구 – 대통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 국회의 자율성과 기능약화	– 의원 자율성 제고	– 원내와 원외의 이중구조로 인한 의정활동 부실
공직 후보 선출	–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 밀실공천	–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 개방형 예비선거에 유권자의 참여 저조로 인한 대표성 취약 – 미디어 위주의 경선 캠페인으로 정당조직의 약화 – 공천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 → 당내 갈등 유발
당정 분리	– 대통령의 당 총재직 겸직으로 당을 사당화 – 의원의 자율성 제약	– 제왕적 총재 종식	– 당과 정부의 협력 부족으로 → 당정 갈등 및 입법 혼란 유발

출처: 김용호(2008, 197)에서 재인용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리한 것이 〈표 6〉이다.

특히 두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지구당 폐지, 공직 후보 선출, 당정분리 등이다. 대중조직 정당 모델을 지지하고 있는 최장집·박찬표·박상훈(2007)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의 지역적 기반 및 책임정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반개혁적 조치라 비판되어 왔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 조치들은 기껏해야 대중적 정당정치의 위축과 정치엘리트 중심의 '비대중적 정책정당화'로 귀결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혁파해 '대중적 정당정치'를 회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당개혁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박찬표인데, 그는 "열린우리당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목적과 방향은 옳았지만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개혁의 부작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철학의 부재, 구체적으로는 정당정치와 정당정부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박찬표 2012, 55).

한편, 원내정당화의 주창자들은 최근의 정치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평가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내정당화의 지지 근거와 최장집으로 상징되는 대중조직 정당 옹호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속내를 유출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원내정당화, 지구당 폐지, 당정분리 등 일련의 조치들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구태를 청산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문제점들은 의원들의 원외 당직 겸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원외정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진통"(김용호 2008, 196)으로 이해해야 하며 향후 방향은 기존 개혁 조치의 확대와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정당개혁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정당개혁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정당개혁을 비롯하여 제도개혁을 둘러싼 논의들은 단기적인 파당적 이해의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상황에 대한 도덕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극하는 반부패담론이 지배하였으며, 신자유주의원리에 따른 효율성 가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최장집 2006, 79).

또 다른 비판은 한국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거대담론과 이론 중심의 정당개혁 담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양극을 오감으로써 유권자와 지지자들 모두에게 정당이 지향하는 조직 모델과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혼란을 주었다는 점이다. 두 담론은 "상호 교류 내지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현문우답의 대화"를 계속하였다. 문제는 담론의 이러한 배타적 성격 때문에 사회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모슬러 2013, 371).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들과는 다른 맥락, 즉 정당개혁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 즉 '좋은 시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내세우지도,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시키지도 못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진보개혁 진영은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단체이든 지난 10여 년 동안 '좋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뿜어내는 자기표현의 욕구와 시민행동주의를 정치적 자산이자 에너지로 모아내는 데 실패했다. 기존의 정당개혁론은 왜 21세기에 들어서 진보진영과 야당이 선거 때마다 고전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지 않다. 탈물질주의-진보-여성-신세대로 구성된 좋은 시민의 조합은 광장의 정치에서는 비교우위를 갖지만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의 영역에서는 수동적 관망 집단이다. 요지는 이들의 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행동주의와 자기-표현의 욕구를 어떻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로 연결할 것인가가 정치개혁의 본질이자 정당혁신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1)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출처는 고대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상적인 좋은 시민은 소속된 정치공동체에 단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동체의 교육과 삶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의 전이를 꾸준히 시도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장의관 2008).

좋은 시민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의 핵심 요소와 원리가 시대마다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은 질서와 준법의식으로 충만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시민(citizen duty)이었다면 후기산업화 단계의 좋은 시민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행동주의가 강한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이다. 시민적 의무 모델이 객체로서 시민의 책무와 시민성의 전통적 인식을 반영한다면, 참여적 시민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각하고, 기꺼이 자신의 원칙을 위해 행동하며, 정치 엘리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Dalton 2008, 2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좋은 시민이 후기산업화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시민성(citizenship)이라고 한다면 세계화와 유럽연합(EU)의 출현, 다문화사회의

〈표 7〉 좋은 시민의 철학적 기반과 차이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
모델	• 민주적 시민성의 엘리트-전통적 모델 • 알몬드와 버바의 신민-참여적 정치 문화 • 시민 역할의 한정 • 기존 정치질서와 권위를 강화	• 자유주의적 또는 공동체주의적인 모델 • 바버(Benjamin Barber)의 강한 민주주의와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세대	• 위대한 세대의 규범 • 충성스러운 객체(loyal subject)	• 신세대의 규범 • 해방의 주체
영향	•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이 공중(public)에 대한 회의로 연결	•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

도래 등으로 그 시민성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선진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이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민성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잉글하트·웰젤 2011; Dalton 2008).

2) 좋은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져 왔던 앞의 현상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는 해도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후기산업화의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해방적 효과를 낳는다는 잉글하트·웰젤(2011)의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상이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표 8〉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차이

	산업화	후기산업화
영향	관료화, 세속화, 합리화, 중앙집중화	자율성과 자기표현 가치
권위의 정향	권위의 세속화	권위로부터의 해방
목표	기아감소와 수명연장을 위해 물질적 산출의 극대화	좋은 생활과 경험의 질을 중시
균열	사회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균열	문화적 이슈와 삶의 질에 기반
핵심 이슈	성장	환경보호
위험	체험적, 즉각적 위험	인지적 성찰을 요하는 추상적·장기적 위험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그들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후기산업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민들의 자기표현 가치(self-expressive values)를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은 획일화와 표준화를 강조하였던 산업화와 달리 후기산업화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공동체주의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본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증대와 고등교육의 증가로 인지기술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자율성이 증진된다. 끝으로는 사회적인 자유화 효과이다. 산업사회의 대중적인 생산체제는 훈육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획일주의를 강제하지만 후기산업화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다원화함으로써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잉글하트·웰젤 2011, 66-68). 주목할 것은 자기표현 가치의 성장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자기표현 가치는 본질적으로 해방적이고 인민-중심적이며, 그리고 다양한 전선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애적 사회의 등

장을 알리는 전조이다(잉글하트·웰젤 2011, 89).

둘째는 후기산업화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 즉 시민행동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그들은 후기산업화가 산업사회의 제도적인 많은 부분들을 잠식하여 권위주의적 사회에는 민주화를 가져오고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는 보다 엘리트에 도전적이고, 이슈 지향적이며, 그리고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강조점은 투표보다 일시적이고, 쟁점 이슈와 연관된, 그리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형태의 시민행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참여 방식은 엘리트가 이끄는 선거 캠페인과 정당정치에서 대중의 자기표현이라는 자율적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잉글하트·웰젤 2011, 90-93).

셋째는 후기산업화는 금전과 권력, 생존과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행복과 삶의 질 등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 가치로 삶의 목표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에 소리 없이 커다란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잉글하트(Inglehart 1980)는 이를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2000년 기준) 이상 23개 고소득 국가 중 19개국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지만(83%) 15,000달러 이하 19개 사회 중 14개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74%).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세계관 차이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했다(잉글하트·웰젤 2007, 198).

우리의 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지침은 달톤(Russell J. Dalton)의 좋은 시민(good citizen)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그의 연구대상의 초점이 미국의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어쨌든 그의 논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좋은 시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표 9〉 시민성의 변화 배경과 정치적 결과

사회조건의 변화	시민성 규범의 변화	정치 결과
• 세대 변화: 위대한(the Greatest) 세대에서 X세대로 • 삶의 수준: 풍요와 번영의 확대 • 교육: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 • 일 경험: 블루칼라에서 지식노동자로 • 성 역할: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를 위한 시민 권리와 기회의 증진	투표와 납세, 준법을 강조하는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 타인 배려, 독립적,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성(Engaged citizenship)*	• 참여 패턴: 투표에서 저항과 직접행동으로
		• 정치적 관용: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집단을 수용
		• 정부의 역할: 제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로
		• 사회정책: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점증하는 지지
		• 정부신뢰: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감소
		• 민주적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압박

자료: Dalton(2008, 4)

범을 재구성하며,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행동과 정치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9〉이다.

달톤의 핵심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적 의무의 감소와 참여적 시민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의무(duty-based)에 기초한 시민성 규범은 선거에서의 투표와 선출된 정부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을 자극하지만 참여적 시민성은 자원주의(voluntarism)에서 공적 저항에 이르는 다른 형태의 정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조적인 규범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관용, 공공정책 중시 등을 재구성한다. 그는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퍼트남의 주장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보다 젊고 보다 많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야심찬 도전의 반영이다(Dalton 2008, chapter 3).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던 정부와 엘리트의 신뢰와 권위인 것이다.

4. 한국사회에 좋은 시민은 존재하는가?

1) 후기산업화 시대로의 본격적 진입

(1) 세대 변화: 산업화세대에서 G세대로

한국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 그리고 민주화세대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소속 학문과는 상관없이 공통된 평가와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화세대는 한국전쟁과 빈곤의 경험 속에서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를 신봉하며 반공-반북-친미-냉전의식을 내면화한 세대이다. 반면 민주화세대는 반공이나 성장보다 자유-민주주의-인권을 더욱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홍덕률 2003, 156-157; 오세재·이현우 2014, 212).

잉글하트는 "2차 대전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팽창 결과,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젊은 출생 코호트들의 형성기 경험은 나이든 코호트들이 겪은 경험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며 그 결과 각 코호트들은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잉글하트와 웰젤 2011, 4). 잉글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 중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둘러싼 세대 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해당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10〉 출생 코호트별 인구 구성비

출생 시기	세대명	1970년		1985년		2005년		2015년	
	대분류	연령	%	연령	%	연령	%	연령	%
~1910	식민지/ 전쟁 체험세대	60+	5.4	75+	1.4	65	9.3	75+	5.2
1911~ 1940		30~59	27.6	45~74	18.7				
1941~ 1950	산업화/ 민주화세대	20~29	15.0	35~44	11.8	55~64	8.9	65~74	7.4
1951~ 1960		10~19	23.8	25~34	18.8	45~54	14.4	55~64	12.4
1961~ 1970		0~9	28.1	15~24	21.0	35~44	17.5	45~54	16.8
1971~ 1980	G세대 (탈냉전· 정보화세대)			0~14	28.2	25~34	16.5	35~44	16.2
1981~ 1990						15~24	14.4	25~34	14.3
1991~ 2000						0~14	19.1	15~24	13.4
								0~14	14.3
총인구		31,436천 명		41,621천 명		47,041천 명		50,424천 명	

자료: 1970년과 2005년은 박재흥(2009, 25)에서 재인용. 1985년과 2015년은 통계청의 〈연령별 시도인구〉(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표 10〉을 보면, 유신체제 전야였던 1970년의 한국의 인구구조는 식민지·전쟁체험세대가 전체 인구의 33%를,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51.9%나 차지하였다. 민주화와 친화력이 있는 20대가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 사이에 낀 모양새이다. 주목할 점은 식민지·전쟁체험세대의 감소와 G세대(탈냉전·정보화)의 증가이다. 1987년 민주화 당시 20.1%였던 식민지·

전쟁세대는 2005년에는 9.3%로, 2015년에는 5.2%로 감소하였다. 대신 1970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는 2005년에는 30.9%를, 2015년에는 43.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세대 변화가 낳은 정치적 효과는 물질주의의 감소와 탈물질주의의 증가라는 가치와 문화의 구조적 전환이다.

(2) 삶의 수준: 생존에서 풍요와 번영(Well-being)의 추구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장한 전쟁 이전 세대는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강조하는 생존 가치 혹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함에 비하여, 경제적·신체적 안전을 당연시하는 전후 세대는 자기표현, 삶의 질 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성공적인 근대화 국가의 사례임에 틀림없다.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역동성은 '압축적 근대화'의 비정상적인 '압축률'에 비밀이 숨어 있다.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을 시작한 17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 낸 250년의 근대화과정을 한국사회는 1962년에서 2000년까지 40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룩함으로써 8배 이상의 압축

〈표 11〉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2014
1인당 GDP(만 원)		0.50	2.90	29.80	213.80	951.20	1,910.70	2,945.20
실업률	전체	–	8.1	4.1	4.0	2.1	3.7	3.4
	청년	–	–	–	7.6	4.6	8	9
인플레이션(%)		–	13.5	25.3	2.5	4.5	2.8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성장을 이루어냈다(심광현 2010, 23-25).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 발전의 한 단면은 〈표 12〉의 주요 정보화 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화를 추진한 지 20년 만에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국가정보화 지수(NCA)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미래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에 힘입어 국가 전반의 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 발전지수 4회 연속 세계 1위, 세계경제포럼(WEF · 다보스포럼) 네트워크 준비도지수 10위권 진입 등을 들었다(연합뉴스 2014/9/1).

〈표 12〉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화 지표

연도	PC보급대수 (천 명당)	이동전화가입자	PC통신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988	–	20,353	1,185	–
1990	–	80,005	11,729	–
1992	20.8대	271,868	117,151	–
1995	36.7대	1641293	718,188	–
1998	41.8대	13,982,477	6,438,465	–
2000	97.9대	26,816,398	16,807,067	3,870,293
세계 순위	9위	24위	9위	1위

자료: 2000년까지는 심광현(2010, 44)에서 재인용, 세계 순위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의 〈국가정보화지수(NCA) 순위〉를 재작성

(3) 성 역할: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역할

지난 수십 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문화적 변동은 성적 평등으로의 전환이다(잉글하트·웰젤 2007, 109). 그러한 전환은 한국사회에서도 더디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5년에 여성의 3분 1만이, 그것도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불과 40년 만에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역할은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선두권이다. 1965년만 해도 여성의 대학 진학은 엄청

〈표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경제활동 참가율(%)	37.2	39.3	40.4	42.8	41.9	47.0	48.4	48.6	50.1	49.2	5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statHtml/statHtml)

〈표 14〉 우리나라의 대학생 추이

		1965	1975	1985	1995	2005	2014
대학 진학률(%)	전체	32.3	25.8	36.4	51.4	82.1	70.9
	남학생	–	–	38.3	52.8	83.3	67.6
	여학생	–	–	34.1	49.8	80.8	74.6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	전체	–	–	311.8	424.2	642.0	638.2
	남학생	–	–	443.7	559.5	799.8	754.7
	여학생	–	–	179.7	287.9	485.0	521.7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통계자료〉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난 특혜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일반 행정직(전국 모집)의 경우 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연합뉴스 2013/11/19). 또한 안전행정부가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합격자의 58.1%인 25명이 여성이며, 최고 득점자와 최연소 합격자도 여성이었다(월간조선 2013/11/29).

(4) 일 경험: 블루칼라에서 지식노동자로

달톤은 블루칼라에서 지식노동자로 전환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위계적인 조직의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명령과 반복 일상(routine), 구조와 위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지식노동자들은 창조적, 기민함,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으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명사가인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이들을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으로 명명하였고 그들의 경력을 개별성과 다양성, 개방성과 업적주의의 가치와 연결시켰다(Dalton 2008, 77-80).

〈표 15〉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기준)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5	2014
산업 구조 (%)	농어업	39.3	26.4	12.5	5.8	3.1	2.3
	제조업	22.1	32.1	36.1	38.4	37.5	38.6
	사회서비스업	35.0	39.0	51.4	55.8	59.4	5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5년 전체의 40%에 달했던 농어업 취업자 수는 반세기(2014) 만에 2.3%로 급감하였다. 반면 동 시기에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35%에서 무려 59.1%로 급증하였다. 특히 IT 산업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노동자 없는 공장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과제를 던져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로 접속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신유목적 사회 출현과 함께 사회조직은 위계형 피라미드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임혁백 2011, 426).

(5)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를 위한 시민 권리와 기회의 증진

잉글하트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관용의 증진이다. 1995년에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조차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2015년 5월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탈물질주의 세대의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음의 〈표 16〉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표 16〉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관용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관용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Dalton 2008, 90).

관용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물론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2006)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는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병력자(에이즈 환자·한센인), 군인·전의경·새터민·시설생활인 등 11개의 집단이 해당된다. 여기에 혼혈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종적·종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16〉 도전적인 정치 집단에 대한 관용

(단위: %)

대상 집단	행동	1976	1988	1994	2004	변화
공산 주의자	발언 허용	53	62	68	70	+17
	교육 허용	40	50	57	66	+26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5	61	68	71	+16
무신론자	발언 허용	62	71	73	77	+15
	교육 허용	39	47	54	66	+27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8	65	71	73	+15
동성애자	발언 허용	62	73	81	83	+19
	교육 허용	52	60	72	80	+28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6	63	70	70	+14
군사 주의자	발언 허용	53	58	64	67	+14
	교육 허용	35	39	47	54	+19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5	59	65	69	+14
인종 주의자	발언 허용	60	63	62	62	+2
	교육 허용	41	43	44	47	+6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60	64	68	66	+6
평균		52	59	64	68	

자료: General Social Survey(1976~2004); Dalton(2008, 85)에서 재인용

적·문화적 소수자들을 덧붙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증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안〉(2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민권·참정권·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민권의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관용의 증진을 압박하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내부 요인은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

했다는 사실이다. 연세대 구성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3만 5천여 명인 다문화가정의 인구는 2020년께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때가 되면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중앙일보 2006/4/4). 외부 요인은 재일한국인의 참정권과 장기적으로는 중국까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 교육감선거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2) 좋은 시민의 정치 활동의 패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선진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행동의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으며, 탈물질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을 자극하고 비당파적 참여기회를 통해 정치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선거정치 참여는 줄고 있지만 부당함에 대한 항의, 정치적 소비자 중심주의, 자발주의, 인터넷 행동주의와 같은 직접행동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Dalton 2008, 137).

물질주의자들이 투표참여를,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철희(1997)는 세계가치조사(1996년) 한국 자료 분석을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파업 등의 저항적 정치행위나 각종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치지향이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수택·박재흥(2011)은 1990~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4차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저항적 정치행위 참여는 탈물질주의자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한국 사회운동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김욱(2013)의 연구에 따르면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비선거참여에 영향력을 주로 행사하고, 투표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비선거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는 그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17〉은 KSDC(2010)의 6차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이념에 따라 필자가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6] 진보와 보수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정치참

〈표 17〉 한국인들의 가치와 정치참여

		KSDC(2010)	
		투표참여	시민행동
가치	물질주의자	7.44	-34.81
	혼합형	-2.89	3.31
	탈물질주의자	13.72	59.58
이념	진보	-3.22	20.58
	중도	-4.88	1.21
	보수	23.22	-28.40

6) 세계가치조사의 투표참여는 3종류의 선거(지방선거/총선/대선)에 대한 응답자의 참여 의사를 측정한 것이다. 반면 시민행동에는 1. 탄원서·진정서·청원서에 서명, 2. 보이콧(불매·구독거부 운동)에 참여, 3. 평화적 시위나 (촛불) 집회에 참여, 4. 정치후원금 기부나 선거운동 참여, 5. 파업·점거농성에 참여 등이 포함된다.

여 양상을 보여주었다. 진보와 보수의 투표참여의 편차는 5.25였지만 시민행동의 편차는 무려 73.09에 달할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광장의 정치'와 '촛불시위'를 진보가 독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도는 투표참여와 시민행동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중간 수준에 끼여 있다. 요약하자면,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정치참여의 방식은 투표참여가 아니라 시민행동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보가 시민행동을, 보수가 투표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맺음말: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좋은 시민과 좋은 정치의 결합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호혜성과 상호 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의 증진이라거나 계파 청산 또는 공천혁신에 있다는 정당개혁론의 인식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위로부터의 동원과 관료적 규율에 근거를 둔 산업화의 정당정치와 이를 생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들과의 부조응에 있다. 보수정당은 기존의 방식대로 투표 중심의 의무적 시민들과 대체로 정렬(alignment)을 이루고 있지만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새롭게 등장한 시민 세대와 제대로 된 결합 방정식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와 좋은 시민들의 정치적 재편(realignment)은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표방, 자기표현 욕구의 중시, 시민행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주의의 선호 등을 효과적인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적극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장이나 촛불은 더 이상 '집합적 열정의 찰라적 분출'(최장집 2007, 235)이 아니다.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의 등장 배경을 이해못한다면 노사모 현상도, 안철수 현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민정치'라는 해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시민정치는 정당과 이익집단을 매개로 한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광범위한 결정권 행사를 지향하는 새 정치의 비전과 연관되어 있다. 즉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직접적 참여를 통한 시민정치 세력의 공간 확장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정치가 일련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정치적 담론이자 전략적 프로그램이 됨으로써, 그것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정상호 2013). 요약하자면, 시민정치의 이론화와 프로그램이 좋은 시민과 좋은 정치를 조응시키는 해법이며, 그것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국민투표·국민발의·국민소환·국민소송)한다. 아울러, 현행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로의 장애 문턱을 낮춘다.[7]

---

7)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지방수준에서조차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주도성과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하승수·이호 2009). 이와 더불어 최근 삼척(2014/10)과 영덕(2015/11)에서 있었던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삼척(85%)과 영덕(92%)에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지만 원전이 국가 사무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둘째, 좋은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슈와 정책을 개발하고 정당 문화를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당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민의 정치참여의 욕구와 에너지를 보수와 진보, 또는 양당제 등 기존 정당체제로 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과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기존 정당체제로 유입되기를 거부하는 좋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시민정치나 녹색당, 풀뿌리 정당 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과 생활정치에 입각한 풀뿌리 정당(local party)은 두 가지 점에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첫째는 좋은 시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제도화된 정당에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패권적 정당체제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좋은 시민의 보고는 여성이다.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우

〈표 18〉 세계 여성 정치인 현황

	의원		장관	
	순위	비중(수)	순위	비중(수)
스웨덴	4	45.0%(157/349)	2	56.5%(13/23)
핀란드	8	42.5%(85/200)	3	50.0%(9/18)
벨기에	10	41.3%(62/150)	10	41.7%(5/12)
노르웨이	13	39.6%(67/169)	5	47.1%(8/17)
덴마크	15	39.1%(70/179)	7	45.5%(10/22)
독일	22	36.5%(230/631)	20	33.3%(5/15)
대한민국	91	15.7%(47/300)	67	11.8%(2/17)

자료: http://www.unwomen.org/ca/news/stories/2014/3/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리나라의 여성 정치인 현황은 세계 하위권이다. 국제의회연맹(IPU)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 여성 정치인 지도'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다. 앞의 〈표 13〉을 보면 세계 여성 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1.8%로 집계됐으나 한국은 이를 밑도는 15.7%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9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선거인 지난 지방선거(2014)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여성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넷째, 투표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진입장벽을 현격히 낮춤으로써 시민행동과 선거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미국 정치가 '1930년대 뉴딜 철로를 달리는 21세기 정당정치'(테드 할스테드·마이클 린드 2009, 41)라고 한다면 한국 정치는 '87년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20세기 카르텔 정치'에 가깝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당의 카르텔체제를 강화시켜 온 현재의 다수 득표제도(FPTP)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등 이해집단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거제도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한 후 의회에서 가부에 대한 비준을 얻는 대담한 처방이 필요하다. 아니면, 선거제도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투표와 결부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락하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호별방문 허용,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등 현행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후기산업화 테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연구의 독창성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잉글하트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사회경제 발전의 밝은 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 거꾸로 불평등과 신빈곤 등 신자유

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간과라는 적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좋은 시민들도 번영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평생 비정규직 인생을 겉도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나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삼포세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돈다는 뜻의 '잉여세대'로는 좋은 시민도, 좋은 정치도 창출할 수 없다. 좀 더 도덕적으로 자신의 기호를 표출하고 다양한 선택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주의와 복지사회 없이는 '효과적인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성장과 분배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사회경제를 창출하는 데 실패해 왔다. 성장과 분배, 복지와 생태를 동시에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의 창출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강명세. 2008. "한국의 보수화 회귀와 진보세력의 선택." 『동향과 전망』 통권 72호. 64-88.

강수택·박재흥. 2011.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Oughtopia』. 26권 3호. 5-38.

고 원. 2013. "정치 균열의 전환과 2012년 대통령선거: 세대와 계층 변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 88호. 201-224.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김동열. 2013.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도."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18).
김용호. 2008.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195-210.
김 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6권 2호. 27-59.
김 욱·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대전과 목포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9권 1호. 179-202.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88-110.
마넹, 버나드, 곽준혁 역. 2011.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마인섭·장 훈·김재한.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2호. 29-52.
모슬러, 하네스 B. 2013.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인간사랑.
민병기·김도균·한상헌. 2013. “대전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권 1호.
박상호. 2009. “포털뉴스 이용 동기가 인터넷 자기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냉소주의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박재흥.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81호. 81-105.
박재흥·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제46집 4호. 69-95.
박찬표. 2012. “열린우리당의 정당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통권 27호. 47-59.
_____. 2003.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 11집. 155-181.
서복경. 2003. “정당개혁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원내정당화 논의의 재고.”

『동향과 전망』 60호. 81-99.
심광현. 2010.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문화과학』 62호. 17-71.
안명규·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23호.
오세재·이현우. 2014.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의정연구』 제20권 제1호. 85-111.
우석훈·박권일. 2007.『88만원세대』. 레디앙.
윤민재. 2011. “네티즌의 현실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정보와 사회』 통권 20호.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34-261.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의정연구』 제9권 제1호. 41-68.
임혁백. 2011.『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출판부.
잉글하트·웰젤, 지은주 역. 2011.『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김영사.
잉글하트, 정성호 역. 1980.『조용한 혁명』. 종로서적.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87-112.
장의관. 2008.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긴장: 아리스토텔레스 정치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2호. 5-29.
장 훈. 2010.『20년의 실험: 한국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나남.
정상호. 2013. “안철수 현상의 의미와 민주진보진영의 과제.”『시민과 세계』 통권 22호. 50-61.
정진민. 2007.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국가전략』 13권 2호. 105-134.
_____. 2003.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보』 제2권 제2호. 23-39.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봄호). 61-83.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테드, 할스테드·마이클 린드 공저, 최지우 역. 2009. 『정치의 미래: 디지털 시대의 신 정치 선언서』. 바다출판사.
하승수·이 호. 2009.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트, 마이클. 2002. “인터뷰: 자본의 제국에 대항하는 다중.” 『문화과학』 통권 32호. 50-6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국가정보화백서』.
한상익. 2014. “한국정치의 신뢰위기: 2014 정치개혁의 목표와 과제.” 『이슈브리핑』 3호.
한 준. 2008. “한국사회는 보수화되었나?: 의식과 이념의 변화.” 『시민과 세계』 제13호. 25-45.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통권 64호. 25-51.

Ainsworth, Scott H. 2002. *Analyzing Interest Politics: Group Influence on People and Policies*. W. W. Norton & Company.
Dalton, Russell 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CQ Press. Washington D.C.
Fung, Archon, and Eric Olin Wright. 2003. “Countervailing Power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London, New York: Verso.
Macedo, Stephen et al. 2005. *Democracy is at risk: How Political Choices Undermine Citizen Particip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Putnam, R. D. 2002.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e, Alan. 2006. *Does American Democracy Does Work?* New Heaven, Yale. Univ Press.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문초록

Discordance between Good Citizen in the Era of Post Industrialization and Party Politics of Industrial Age

Jeong, Sang Ho
Seowo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and explored the tasks and alternatives of Korean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As a starting point, I criticized two theory, one is social capital and the other is party reform which are ranked as dominant dialogues related to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wo theories have common limits that look over recent shift and structural transition created by post industrialization. Our research show that modern-day citizens in Korea likewise other advanced states are the most educated, most cosmopolitan, and most supportive of self-expressive values than any other public in the history of democracy. Changing social conditions reshape the norms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citizens that is from 'citizen duty' stressed on citizen's vote, pay taxes, obey the law to 'engaged citizenship' emphasis on independent, assertive civic activism ranging form volunteerism to public protest. Therefore, We can draw a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at are necessary to expand direct democracy institutions on the level of central state and introduce local party systems.

■ **Key Words:** good citizen, self-expressive values, civic activism, post industrialization, citizenship

투고: 2015.9.30 심사: 2015.10.15 확정: 2015.11.13